

여야, 추미애 검찰 인사 두고 격돌

민주당 “장관 고유권한…檢, 기 싸움 하는 모습 매우 유감”

한국 “추미애, 직권남용 혐의 ‘탄핵감’…형사고발 할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여야는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8일)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 이틀째 맞붙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인사는 법무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검찰의 반발에 유감을 표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추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 “검찰 조직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형사·공판부 출신 검사를 중용해서

특정 인맥에 편중된 검찰의 인적 구성에 균형을 잡은 인사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인사 과정에서 검찰이 보여준 모습은 매우 부적절했다”며 “검찰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제정권자는 법무부 장관이다. 검찰청법 34조에 따라 검찰 총장이 인사에 대해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최종적인 인사안을 수립하고 제정하는 것은 장관 고유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검이 마지 불만이 있는 듯, 또 대검과 법무부 사이에 인사를 둘러싸고 기싸움 하는 듯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인사권자의 인사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다. 이런 의무가 검찰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선 ‘추미애 표’ 검찰 인사에 대한 격양된 반응이 쏟아졌다. 추 장관을 겨냥해 ‘탄핵감’, ‘망나니 장관’과 같은 표현도 나왔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검찰 검사급 이상 간부 인사 기습 단행은 사회에 가까운 속칭”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무도한 권한 남용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사에 대한 탄압이다. 측근 수사를 무력화하고 수사 방해를 하려고 한 것”이라며 “친문 유일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검찰 무력화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권은 망나니 정권이다. 군사 독재 시대도 없던 검찰 대학살”이라며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은 탄핵받아야 마땅하다. 이번 인사는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한 검찰청법을 묵살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과 추 장관 두 사람은 직권을 남용하고 검찰 수사를 방해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한국당은 추 장관을 검찰 업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김윤호 기자



이재우 국민통합연대 창립준비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도·보수대통합 제2차 정당·시민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중도·보수대통합 신당 창당” 합의

한국당·새보수당, 사회단체와 함께 혁신통합추진위 구성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을 포함한 정당·사회단체가 중도보수대통합위한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신추)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한국당과 새보수당은 사회단체와 함께 혁신추를 통해 중도·보수대통합 신당 창당을 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당·새보수당과 국민통합연대·자유외교화·법시민사회단체연합·전진4.0 등은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정당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열고 박형준 동아대 교수(자유외교화 공동의장)를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통합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혁신통합위는 혁신과 통합을 원칙으로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중도 보수 세력의 대통합을 추구하기로 했다. 또 더이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가 총선 승리에 장애물이 되지는 안 된다는데 뜻을 모았다.

안행환 국민통합연대 사무총장은 브리핑에서 “이양수 한국당 의원이 황교안 대표로부터 전권을 위임 받아 동의했다”며 “정병국 새로운보수당 의원이 이번 발표

문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정당·단체는 이날 △중도·보수대통합을 위한 혁신통합위원회를 구성한다 △대통합 원칙은 혁신과 통합이다 △통합은 시대적 가치인 자유 공정을 추구한다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중도·보수 등 모든 세력의 대통합을 추구한다 △세대를 넘어 청년들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통합을 추구한다 △더 이상 탄핵문제가 총선 승리의 장애가 되지 않 된다 △대통합의 정신을 담은 새로운 정당 만든다 등 7가지 원칙에 대해 합의했다.

그는 우리공화당 참여여부에 대해선 “우리공화당 등 다른 시민단체에도 공문을 보냈지만, 참석하지 않아 일단 회의를 진행했다”며 “구정전에는 가시적인 결과가 나와야 한다. 오늘 혁신통합추진위가 구성됐고 위원장을 선임했기 때문에 위원장을 중심으로 일정을 잡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와 접촉했던 지에 대해 “아직 논의되지 않았지만, 위원장이 임명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 및 일정을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세균 청문회, 이견 불구 마무리 수순…내주 동의안 표결할 듯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추가 검증’을 둘러싼 여야 이견 끝에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들은 9일 오전 ‘추가 검증’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당초 7~8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한국당은 전날 오후 검증위원회 구성 등 추가 검증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여야 간사 간 추가 논의를 통해 향후 일정을 협의해 줄 것을 요구한 뒤 전날(8일) 시를 맞아 산회를 선포했다.

한국당은 정 후보자 지지단체인 미래농촌연구회·국민시대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관계자 면담 등을 요구했다.

또 정 후보자의 지인들이 등장하는 화성 동탄 택지개발 사업 개입 의혹과 관련해 현장 검증 및 관계자 면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은 두 가지 사안에 대한 검증위 구성 또는 추가 청문회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맹탕 청문회’ 비판을 피하고, 임명동의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양보하더라도 10일까지 추가 검증을 마친 뒤 인사청문결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화성 동탄 택지개발 개입 의혹의 경우, 한국당의 요구 수용시 현장 검증 및 관계자 면담 등 추가 검증이 장기화할 것을 우려해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여야가 이날 오전 협의에 나서지 않으면



서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인사청문특위 채택 없이 오는 13일 본회의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총선 출마 공직자의 사퇴시한인 16일까지 이낙연 총리의 사퇴 및 정 후보자의 임명 절차가 원만하게 완료되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이해찬 “최근 20년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4·15 총선과 관련 “최근 20년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나라의 명운이 바뀐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야 나라가 바로서고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으로 마치고 재집권할 중요한 선거”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21대 총선 준비도 차근차근 하고 있다. 총선거획단을 만들어 운영하고 인재영입도 지금 하고 있다”며 “오늘까지 6명을 발표했는데 비교적 평가가 좋은 것 같다. 앞으로 계속 발굴해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선대위를 1월 중 구성할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활동하도록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균형있게 잘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